“新 국제 경제질서, 한국이 주도해야”

李대통령, 佛 르 피가로지 인터뷰…새 국제기구 필요성 역설

내년 4·4분기땐 경기 회복…‘韓-EU FTA’ 연내 타결 희망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제경제 질서 재편 움직임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 경제위기와 관련, 기존 금융감독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뒤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대대적인 개혁이나 새로운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감독시스템이 현재 (디지털시대) 금융계 변화에 맞춰가지 못함을 보여 준다”면서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서는 현재 있는 체제를 대개혁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이뤄냈다”면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때에는 신흥국가들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9회 세계지식포럼’ 축사를 통해 밝힌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필요성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新)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24,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7차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도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선진국 위주의 현행 국제금융체제에 우리나라 등 신흥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호주의 회귀 주장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나라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영향을 많이 받으나 어려운 시기에 국가경쟁력을 갖는 전략을 펴려 하고 있다”면서 “내년 4/4분기쯤 되면 회복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질문에는 “한·중·일 3국이 경제통합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으나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통상과 투자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고 있다”며 “이런 협력이 강화되면 한단계 더 높은 협력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밖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한·EU(유럽연합) FTA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군·구 의장協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정가 브리핑

‘5+2 광역경제권’ 정책 철회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사업을 비롯,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2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과 종부세 완화 방안 등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들 정책의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향후 활동 계획 및 평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소선거제 전환 서명운동 전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건실 춘천시의회 의장)는 22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제135차 시·도 대표회의를 갖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정당공천제는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초의원을 중앙 정치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켰으며, 중선거구제는 소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지역의 대표성이 결여된 후보자가 당선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전국 2천888명의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구제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 감세안, 광주·전남에 타격”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22일 “정부의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제2창당 논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의하면 광주는 1천659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고 전남도도 총 3천365억4천만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가 민주당 일색인데도 민주당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뒤 “광주시와 의회는 감세안에 대한 반대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군부가 동명목재 강탈, 헌납 위장”

진실화해委 발표…1조원 재산 환수 재심 가능성

지난 1980년 신군부가 세계적인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의 전 재산을 강탈하고서도 ‘재산헌납’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28년 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이하 진실위)는 22일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진실위에 따르면 1980년 8월께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 재산을 빼앗으려고 강석진씨 등 사주들을 ‘악덕기업인’으로 몰아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관들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석진씨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영장없이 연행한 뒤 15일~2개월 간 불법구금하고 폭언, 폭행,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것이다.

또 강씨에게 전 재산을 헌납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한편 아들 강정남씨를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 끝내 ‘위임각서’와 ‘승낙서’를 받아냈다.

당시 빼앗긴 재산은 토지 317만3천45㎡를 비롯해 부산투자금융㈜와 부산은행의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금액 16억여 원 등으로 피해자들은 “당시 시가로 4천억~5천억원, 현재 가치로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은 모두 헌납 형태로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증여됐다.

진실위는 당시 수사관들이 한 달 안에 ‘재산환수’를 완수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동명목재처리종결보고’를 검토한 결과, 향후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을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려했던 점도 확인했다.

피해자측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던 동명목재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 목재회사로 1960~70년대 한국 수출산업을 대표하던 기업 중 하나였지만 1980년 국보위에 의해 해산됐다.

동명목재 창업주 장남인 강정남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2006년 10월 진실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한 동명목재 강제해산과 사주재산 강탈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연합뉴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경제정책팀의 교체와 감세 정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자구책, 정부 감독 기능 전제돼야”

민주 ‘경제위기 대책 법안’ 처리 방침

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경제 안정 대책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정부 대책과 금융권의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법안에 대해 쌀 직불금 파문 등과 연계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의 국회 동의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내에서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의 수장을 모두 불러내 집중심사를 벌인 뒤 이르면 내주중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고, 금융권의 자구책 마련 및 정부의 감독시스템 마련 등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추가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등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제공되거나 정부 보증이 이뤄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어 민주당은 정부에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며 “하나하나 따질 것은 따지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은 제기하면서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안 제시 초점 ‘정책 감사’ 호평

국감 인물

기획재정위 강운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모든 질의에 대안을 함께 제시,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무부 장관 출신의 강 의원은 특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의 무사안일한 정책들을 강하게 질타, 녹슬지 않은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과 관련, “일반적인 감세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민 전체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고용장려세, 투자장려세, 근로장려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 호평을 받았다.

또,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심각한 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좋은 제안이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지난 20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배정액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 비해 각각 1/2, 1/3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정을 촉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